

〈제 626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30일 본점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現 송종욱 은행장을 재선임 했다.

2017년 9월 자행 출신 최초로 제13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된 송종욱 은행장은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중심 현장경영을 추진하여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며 2019년 3월 한차례 임기를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1년 1월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임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하여 앞으로 2022년말까지 광주은행을 이끌게 되었다.

금호고속

◆ 이계영 신임 대표이사 승진



금호고속은 지난 30일 이계영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1990년 금호그룹에 입사해 인사·노무, 영업팀장 등을 두루 거친 뒤 이 신임 대표이사는 베트남 법인장으로 현지법인을 이끌었으며, 베트남 재임 시절 교통 발전과 노동자 복무 우수기업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 교통부 장관상,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상무이사로 승진한 뒤 기술, 영업, 지원부문 담당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에서 산업포장을 받았고, 2018년부터는 전무이사로 승진해 금호고속

직행사업부 총괄 본부장을 맡아왔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영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과창출을 통해 회사운영 능력을 입증했으며, 운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측면에서 금호고속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II. 광주경충 소식

〈중장년센터 제2회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지난 29일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2회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40세 이상 1년 이내 퇴직 예정자, 1개월 이내 퇴직자에게 성공적인 전직 및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27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3.29 ~ 4.2)

3.29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 ● 중장년센터 제2회 전직스쿨 프로그램 운영 	4.1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지노위 조정회의
3.31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전문가아카데미 자문위원회의 	4.2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13회 금요조찬포럼

II. 광주경충 소식

〈제1513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4월2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류호택 천년기업경영원 대표를 초청하여「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성장 천년기업이 가능할까?」란 주제로 제1513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제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변혁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천년기업의 경영자들은 어떤 경영 철학을 준비해야 할까? 조직이 천년기업으로 원활한 행보를 위해 어떤 역량을 훈련해야 할까?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난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천년기업 리더십이란 높은 목표를 세운 후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BHAG와 함께 천년동안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리더십이다.

천년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리더십으로 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마음가짐, 감각, 판단, 행동, 결과에 영향을 준다. 생각은 미래 예측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사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선언의 힘을 활용하라. 코칭선언, 참여자 선언 등을 활용하여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한다.

셋째,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명한다. 경영철학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공유하여 위험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래의 비전을 통한 예측 가능한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라.



1. 노사 동향

■ 민주노총은 투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투쟁선포대회 개최

○ 민주노총은 3. 31 전국 16개 지역 동시다발 투쟁선포대회 개최

- 민주노총은 지난 3. 15 2021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관심 집중 및 투쟁동력 제고를 위해 전국 투쟁선포대회를 진행했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월 전 조합원이 총파업투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
- 금번 투쟁선포대회에서 ①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② 재난 생계소득 지급, ③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투기 소득 환수, ④ 노동법 전면개정, ⑤ 국방예산 삭감을 통한 주택, 교육, 의료, 돌봄 무상 지원을 주장

※ 5대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사회대전환 요구, ▲불평등 타파, ▲노동 기본권 요구 관련 15대 요구안 제시

[첨부] 민주노총 15대 요구안

구분	주요 내용
사회대전환 요구	①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② 전체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 ③ 대학까지 무상교육,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 폐지로 학벌사회 타파 ④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⑤ 100만 돌봄노동자, 국가에서 직접 운영 ⑥ 재난시기 해고금지, 산업재편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사공동결정
불평등타파	⑦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법 폐지 ⑧ 부동산 투기소득 과세 확대 ⑨ 재벌개혁(범죄수익환수), 부자증세 ⑩ 사회임금확대(상병수당·국민연금소득대체50%·전국민고용보험제) ⑪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재난생계소득 지급
노동기본권 요구	⑫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⑬ 노동시간단축·안전일터, 일자리 확대 ⑭ ILO 협약기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 개정 ⑮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 기본권 보장

■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노동계 요구사항 발표

- 노동계와 4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3. 31)
 - ※ 고용부장관은 3. 31 최저임금위원회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 ※ 최저임금연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상여금 및 복리후생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장
- 또한, 최근 최저임금이 2.9%(2019년), 1.5%(2020년) 인상된 것과 관련해 공익위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진을 요구
-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 19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몫으로 5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 노총은 노동계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 표출

2. 법제 동향

■ 박대수 의원(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 23)

- (발의 이유) 근로기준법에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위의 법적 근거 부재
-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도 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위
 -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채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토록 하며, 법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채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 출자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 성일종 의원(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 23)

- (발의 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은 의무 공시해야 하나, 동일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친족 지분이 있으면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점, 외국 법령상 정보 제공이 제한된 경우나 회사 또는 친족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동일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점 등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
 - 또한 사업자의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교환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추상적이고 불명확
- (주요 내용) 동일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Ⅲ. 노사 및 법제동향

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하여 동일인의 친족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 및 국외 일반 주주 명부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외 계열회사 소재 국가의 법령상 제한, 친족 또는 국외 계열회사의 정보 제공 거부 등 동일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존재 시 면책

- 또한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에 있어 그 가격·생산량은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한하여 개념과 범위 명확화

■ 송옥주 의원(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3. 24)

- (발의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지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
- (주요 내용)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해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

■ 김경만 의원(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 2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위수탁 계약을 전제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교섭단계를 거쳤으나 계약 미체결 사례도 발생
- (주요 내용)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을 적용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김미애 의원(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 26)

- (발의 이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형사 처벌로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직장생활의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주요 내용) 직장 내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포함

■ 양정숙 의원(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 29)

- (발의 이유) 근로자대표는 현행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 (주요 내용)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여성 근로자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로 지정

■ 소병훈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 29)

- (발의 이유)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졌고 일부 기업 등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
- (주요 내용)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